

신정부 국정과제 – ESG분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가 투영된 신정부의 '청사진'이며 구체적으로는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ESG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 드립니다.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업은 해당되는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신정부 국정과제 ESG 분야 주요 내용

No.	과제	부서	주요 내용
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 즉시 가동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소규모 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 관리상 자율성 확대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산업부	•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 장 창출	산업부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공정위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신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 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 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 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 검증 확대 •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적용('23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년)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년~), 곰 사육 종식(~25년),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년~)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mu\text{g}/\text{m}^3$)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페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페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m³/년 생산)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추진	외교부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RCEP 등 경제협약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외국변호사(미국)
synn@yoonyang.com
02-6182-8502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02-6003-7535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02-6003-7558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조준오 변호사

jojo@yoonyang.com
02-6003-7080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02-6003-7674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02-6003-7470